

일본, 식품안전행정 강화

일본에서는 2001년 9월 광우병(BSE) 발생, 이와 관련하여 2002년초부터 나타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위장표시 문제, 그리고 중국산 수입 채소에서의 잔류농약검출, 무등록 농약의 유통과 사용 등 식품의 안전을 교란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동시에,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품유통의 광역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사고도 광역화,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다. O157이나 광우병 등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생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식품안전행정 확립

소비자에게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로부터 가정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과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특히, 광우병(BSE) 발생이후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역할과 관리하는 부문을 분리하였다. 즉,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농림수산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부문을 맡고있다.

2003년 5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의하여 7월에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여기에는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 분석방법이 도입되었고, ‘리스크 평가기관’과 ‘리스크 관리기관’의 조직적 분리가 도모되었다.

리스크 평가기관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가 내각부에 신설되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주곡의 관리를 일원적으로 행하고 있던 식량청이 폐지되었고, ‘소비·안전국’이 신설되어 후자의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림수산성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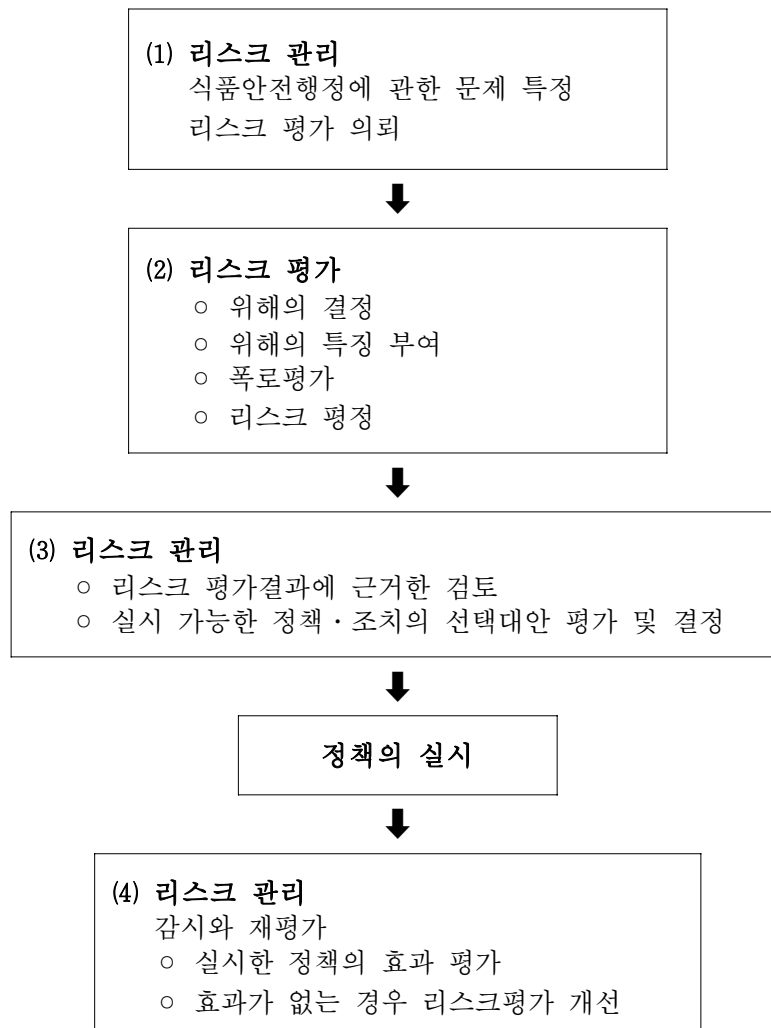
이러한 체제 정비를 근거로 하여 생산이력제(traceability system)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법제정, 무등록 농약사용에 관한 처벌법, 사료 안전성에 대한 법개정 등을 강구하고 있다.

2. 리스크 분석방법 도입

다양화하는 식품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있어서 절대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식품 리스크에 착안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방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리스크분석이다.

식품의 리스크란 식품에 위해 요소가 존재한 결과로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과 정도를 의미한다. 리스크분석에는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3가지 독립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위해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리스크 평가).

그림 1 일본의 식품 리스크분석 체계



둘째,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용 대 효과나 기술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 실시한다(리스크 관리). 셋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업계, 학계 등 모든 관련자에게 리스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리스크 커뮤니케이션).

3. 농림수산행정의 개편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리스크 평가를 담당함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선 농림수산성은 2003년 7월에 기존의 식량청을 식량부로 축소, 폐지하는 대신에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지방농정국에 소비·안전부를 신설하고, 동시에 지방농정사무소에 소비·안전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응하는 형태로 2003년 식품안전관계 5법이 제정되어,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농약·비료·사료 등 적절한 생산·유통·사용 규제, HACCP 등 식품제조공정의 안전관리강화대책 연장 등 제조치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로 시작된 생산이력제는 쌀, 채소, 가공식품, 돼지고기, 닭고기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농림수산성에서의 식품안전정책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의 조류독감이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에 대응하여 노동후생성과 연계하여 해외 위해정보 수집과 분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